

박근혜의 5월 초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 3면을 보시오



사진: 김민정

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2015년 노동자 투쟁

3, 8~11 면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원한다

6~7, 16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IMF도 인정한
저성장과 위기

12 면

그리스
나치 황금새벽당
재판과 반나치 파업

13 면

공무원연금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실무기구에서 탈퇴해야

4 면

전교조
9년 만의 연가 투쟁

5 면

누구의 말일까요?

“만약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완전 ‘구리’ 이완구

“217회”

별 사이 아니라던 이완구와 성완종의
1년간 전화 착·발신 횟수

“황희 정승이 간통도 하고 온갖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 같은 이런 일이 많았지만 세종대왕이 이 분을 다 감싸서 명재상을 만들었다.”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의 이완구 감싸기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인 성완종의 돈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정도”

2억 원이 “푼돈”인 새누리당 의원 홍문종,
그들만이 사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의원 이정현, 창조적 아전인수?

“선물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은 비타500, 선물받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은 비타500”
2012년 비타500 광고

“박 대통령은 본인이 평생 계산을 안 해 보신 분이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박근혜를 보호한답시고
한 변명, 공주님은 돈 쓸 때도 유채이탈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뻗었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는 방법으로 목을 쳐주겠다.”

중앙대 재단 이사장 박용성이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가리켜 한 말

“사실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 … [노동법을 보면] ‘근로자’도 돈 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돼 있다고, 현재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부산북부고용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 천기누설?

“자식을 잃으면 이 나라에서는 죄인이 됩니다.”

경찰의 마구잡이 유가족 연행에 분통 터뜨린
단원과 2학년 3반 고 정예진 학생의 어머니
박유신 씨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다

김지윤

‘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권력 누수를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던 박근혜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목숨도 내놓겠다’던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총리직을 내놓았다.

박근혜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 일인 양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전·현직 비서실장이 모두 명단에 올라 있고, 명단에 있는 대부분이 대선과 당내 경선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직책을 맡았던 자들이다.

성완종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폭로했다. 성완종은 “내가 입을 열면 자리에 서 물러나야 한다”며 현 비서실장 이병기도 지목했다. 첫 비서실장이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에게는 7억 원을 건넸으며 이 돈이 박근혜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도 주장했다.

성완종은 2012년 대선 캠프 조직 총괄부장이었던 홍문종에게 2억 원, 직능총괄본부장이던 유정복(현 인천시장)에게는 3억 원, 당무조정본부장 서병수(현 부산시장)에게는 2억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성완종이 건넨 돈이 박근혜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가 검은 돈으로 대선을 치른 것이 드러나면,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한 번 통치 정당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 조사가 박근혜 대선 자금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 아니라 이완구와 홍준표 주변만 맴도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야말로 부패의 화신이다. 2012년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경남기업 전 회장 신기수가 1982년 박근혜에게 성북동 집을 무상으로 지어 줬다고 폭로했다. 박



이완구는 시작일 뿐이다. 부패의 뿌리를 건드려야 한다 4월 17일 불법대선자금 부패 비리 주범 구속 수사 촉구 노동자·농민·빈민 공동 기자회견.

근혜는 이 집과 관련해 세금 한 톨 내지 않았다. 또한 장물로 취득한 영남대 이사로 있을 당시에, 회계부정과 부정입학 등 온갖 비리가 벌어져 국정감사를 받고 1988년에 도망치듯 퇴진해야 했다. 2013년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건설한 랜드마크72에서 박근혜 한복쇼를 연 것을 두고 박근혜와 경남기업의 관계에 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

성완종 게이트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까지 맞물리며 박근혜의 지지율은 다시 30퍼센트대로 떨어져 좀

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완구가 사퇴하자마자 ‘정치 개혁’ 운운하며 몰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이 특별사면된 사실을 부각시켜 새정치연합으로 초점을 돌리려 한다. 실제적 진실을 흐려 4·29 재·보선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불법”, “폭력”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공격하는 것도 국면 전환 시도의 일부다.

동시에 박근혜는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 반드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

새정치연합에 독립적이어야

새정치연합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최규선 게이트 등 온갖 비리 사건이 터져 세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노무현 정부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 2005년 폭로된 ‘삼성 X파일’은 한나라당(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비리 사슬의 일부임을 보여 줬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할 뿐, 부패를 뿌리

뽑는 데에는 뜻이 없다.

당장에 성완종 사면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뤄졌다. 문재인은 “특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의]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부패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가 운영을 목표로 하는 새정치연합은 대중의 불만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배계급 전반과

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 <조선일보>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은 정치 소란 속에 결코 문힐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라고 거듭었다.

따라서 지금의 박근혜 위기를 두고 “무리하게 꺼내든 사정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모두 다 떠 내려 [보낸대]”는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걱정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국정의 본질은 노동자 공격과 쥐어짜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의 위기를 이용해 ‘국정과제’를 좌절시키는 것이 노동계급과 보통 사람들에게 이롭다. 노동운동은 부패 정권을 향한 항의의 목소리를 모아 박근혜가 성완종 게이트를 쉽사리 덮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직 4월 재·보선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애초 새누리당 우세로 점쳐지던 곳들이 ‘박빙’으로 분류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선거에서 박근혜를 패배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동운동은 선거 결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반격에 나서야 한다. 진보·좌파 세력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 위기 탈출법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의 분열도 커져 일치단결한 공격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박근혜의 위기는 노동계급에겐 기회다.

체제로 향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진보세력은 새정치연합에 독립적 태도로 부패 세력에 대한 항의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의 부패나 비리가 폭로됐을 때 발목 잡힐 수 있다. 정경유착 부패·비리로 부터 어떤 이득도 얻을 것이 없는 노동자들과 평범한 대중만이 진실과 정의의 바로 세울 자격이 있다.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장호중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이 냉혈한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낙인을 찍

어 지역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도록 마녀사냥했다.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은 인근 요양병원 등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며 죽어 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해 우파적 의제를 이끌어가려 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애꿎은 제물이 됐다.

그러나 홍준표와 그의 복지 공격에 맞선 저항도 계속돼 왔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에 맞선 저항은 공공의료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그래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개원 방안을 마

련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주도적으로 이끈 이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 이 투쟁은 2013년 12월 전국을 뜨겁게 달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자 투쟁의 첫발이었다.

진짜 ‘귀족’

물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저항의 열기가 식기를 바랐을 뿐 공공의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홍준표가 국정조사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결과까지

개무시했지만 이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운동이 시작됐지만 1년 넘도록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해 온 홍준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신속히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전환하려 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재개원 운동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남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청사 용도 변경을 승인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

부’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4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사퇴를 요구했다. 지역 인사 4백여 명이 참가한 ‘민생·민주 수호를 위한 경남 315원탁회의’는 4월 20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지역 인사 3백 87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홍준표 구속’을 외쳤다.

이완구는 물론이고 홍준표도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 기업주들과 결탁해 노동자와 서민의 등골을 뽐으려 한 것이 그 죄목이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당장 재개원하고 무상급식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4·24 총파업 이후 당면 과제

적어도 5월 초까지 집중적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국회 안에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려다 거대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성완중 게이트마저 터지자 정부는 한층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결과 개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졌다.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반발이다.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돼, 정부는 플랜B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음을 뜻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느 인터뷰에서 “난 샌드위치 신세”라며 정부와 조합원 사이에 갇힌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서도 대타협 모양새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등이 개악을 전제로 한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실무기구에 매달려 있는 것은 크게 아쉬운 일이지만, 아래로부터의 반발 때문에 심지어 공노총조차 총파업 계획을 내놔다.

고비

민주노총이 올해 초 일찌감치 투쟁의 시동을 건 것은 위 두 가지 사태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성완중 게이트는 정부가 노동자 투쟁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후진 부위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달래려고 기획사정에 나섰다가 제 발등을 찍게 된 사건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해 “정권과 맞짱뜨기”를 선언하고

나서지 않았다면, 한국노총 지도부는 기층의 반발을 훨씬 덜 의식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투쟁적 민주노총 지도부의 등장,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내부의 반발에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가 여러 우려와, 다른 노조 지도자들의 소극성 속에서도 4·24 총파업을 결정하고 조직화에 나선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만약 노동조합의 정해진 일정을 우선시하면서 투쟁을 6~7월로 미뤘다면 연초에 지지율이 급락한 정권의 위기 상황과, 노동시장·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한창인 국면, 세월호 시행령 정국 등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우리 측이 기선을 제압한 상황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심각한 정치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자신이 이를 “생존 전략”라고 강조했던 대로 박근혜는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춰 해외 ‘도피’에 나서면서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을 차

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실무기구 논의마저 시한을 넘기자 초조해진 김무성은 4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공무원들을 국민 세금 빼앗는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기성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을 압박한 것이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의 최종 제출 시한을 사실상 5월 1일로 정한 상태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가이드라인과 시행령을 통해 시급히 추진하려 한다. 5월에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6~7월에 일반하고 요건 완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 속에서도 집요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 지금, 우리 측도 집요함과 단호함으로 맞서야 한다.

4·24 총파업 이후 정부의 개악 추진 일정을 겨냥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업포 한 번 놓은 뒤 개악을 방지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선제파업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개악이 관철되기 전에 선제공격으로 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겠다는 민주노총의 선

제파업 계획은 효과가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찌감치 투쟁의 시동을 건 덕분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연료 삼아 투쟁을 더욱 전진시키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

그러려면 첫째, 무엇보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킴으로써 정세의 반전을 꾀하려 한다. 국정 주도권을 찾고,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고 한동안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투쟁은 단지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스스로 양보를 내지는 않더라도 실무기구에 남아 공무원연금 개악을 묵인한다면, 이는 박근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전제로 개악의 정도를 정하는 실무기구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여야가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적어도 5월 6일까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노조 집행부가 실무기구에 나와 개악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기층에서 계속 이런 압력을 조성하고 확대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중앙 차원의 투쟁 전선을 유지·강화해야지 사업장별 투쟁으로 분산해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일부 사항을 국회로 넘기고, 다른 일부 사항은 가이드라인과 시행령과 단협 시정 지도로 관철시키려 한다. 이럴 때 흔히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국회 대응’과 ‘사업장별 입단협 대응’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 경험은 정부 지침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중심을 두지 않고 각 사업장 별로 각개약진 하는 투쟁이 무기력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분산적 투쟁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가이드라인 반대 공동투쟁을 제안해, 한국노총 지도부가 국회 대응에 초점을 두며 형식만 달라진 협상장으로 어물쩍 돌아가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는 민주노총의 4·24 파업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나 성완중 게이트 같은 정치 쟁점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세월호 정국에서 민주노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구실만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이를 비판하며 앞으로는 민주노총이 이런 정치·사회적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연대위원회도 신선했다.

지금은 이런 문제의식이 적극 구현돼야 할 때다. 성완중 리스트에 기성 야당 정치인이 많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시민사회 진영은 관망 태도가 뚜렷하다. 기성 야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성완중 게이트에 대한 항의를 주도하고 박근혜를 궁지로 몰아붙여야 한다.

이런 활동은 전체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키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좌파 활동가들은 정치적 쟁점들을 이용해 산업 현장에서 투쟁 전진을 위한 활력을 높이도록 애써야 한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나 성완중 게이트 같은 정치 쟁점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안 5월 1일 제출 예고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5월 1일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중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 집요하게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는 4월 16일 남미로 떠나기 전에 김무성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김무성도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개악에 반대하면 “파렴치한”, “매국노”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는 저항을 억누르려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공무원노조가 4월 24일 비상총회 형식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휴일 집회 참석도 ‘채증’하겠다고 협박한다. 청사 내 모임 일체를 불허하고, 주도자는 연행하라며 겁주기에 나섰다.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게다가 여야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특위에서 5월 1일까지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도 5월 1일 국회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악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일정에 합의해 왔다. 김무성은 아예 공무원단체들을 배제한 여야 2+2 협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개악해 반전을 이루려 한다. 지지층을 결속하고 노동자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려는 것이다. 이럴 때 공무



투쟁 회피는 조합원들의 투지를 꺾을 뿐이다.

원연금 양보안을 내놓거나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은 박근혜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배신 행위와 같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 전선에도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오히려 공무원노조는 저들의 위기를 기회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확대

해야 한다. 민주노총·전교조와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한다면 개악 자체를 막을 수 있다.

5월 1일 파업

이미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

화될 5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총재 위원장도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지금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4월 25일 범국민대회 이후 노조 지도부의

계획이다. 여야가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내놓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아직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이행을 포함한 4월 말~5월 초 투쟁 계획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

5월 1일은 전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만여 명이 상경하는 노동절 집회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커다란 지지를 받으며 조합원들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파업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5월 1일 총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총재 집행부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 아니 많은 활동가들은 이총재 집행부가 양보를 전제로 한 실무기구에 참가하고 연금 개악을 수용한 공노총, 교총을 비판하기는커녕 공조를 유지하는 것을 보며 양보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5월 1일 총파업 실현을 위해 조합원들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5월 6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배수진을 친 지금, 우리도 배수진을 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박근혜가 위기에 빠진 지금, 저들을 몰아붙여 공무원연금 개악 계획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가 4월 20일 발표한 입장을 약간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실무기구’는 양보론을 부추기고 파업 발목 잡는 수단

4월 21일 공노총과 교총이 실무기구에서 결국 ‘양보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여금을 평균 21퍼센트 더 낼 수 있다고 했다. 가뜰이나 적은 임금을 21퍼센트나 삭감하는 꼴이다.

실무기구가 개악 여부가 아니라 개악을 전제로 그 수준을 논의하는 기구임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또 이런 기구에 참여하면 양보 교섭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현실로 드러났다.

이처럼 양보안을 강요하는 실무기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공적연금 강화 요구도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총재 집행부는 실무기구에 참가하면서 “더 이상의 고통분담은 안 된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도 “절대 양보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실무기구에 함께 참여한 공

노총과 교총의 ‘양보안’에 대해 침묵했다.

이총재 집행부는 그동안 공노총과 교총이 배신하는 것을 막으려면 실무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실무기구 참여가 공노총, 교총의 양보안 제출을 막지 못했다.

이제 이총재 집행부는 전교조 지도부처럼 양보안을 내놓은 공노총과 교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 또, 실무기구를 탈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개악 추진 도구인 실무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실무기구 탈퇴

한편 이총재 집행부는 ‘실무기구 합의안이 없으면 ‘특위 개악안’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새정치연합 합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으로 말하자면 무려 6백만 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요구도 배신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공무원연금 ‘빅딜은 없다’고 말한 지 1주일 만에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빅딜’했다. 이들은 지금도 세월호 항의 운동과 성완중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정부 여당의 위기를 이용해 제 잇속을 챙기려고 주판알을 튕길 뿐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 내 일부 활동가들은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이총재 집행부가 양보 협상을 추진해 온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불가능



지도부의 실무기구 참가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하고, 어쩔 수 없이 새정치연합에 기밀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새정치연합이 합의 파기 선언을 해 줄 것을 기대하

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말로만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언급할 뿐 실제로는 실무기구에서 양보 협상을 하며 투쟁을 기각하는 이총재 집행부에 대한 독립적인 비판도, 실무기구 탈퇴도 부질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 새정치연합이 뒤통수를 쳤을 때 어떻게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파업으로 저지해야 한다”(공무원노조 성명서)고 응답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사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는 높다.

따라서 여야가 5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공무원노조가 실무기구에 대탈리며 새정치연합만 바라볼 게 아니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최정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가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들어가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4월 24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전교조도 연가 투쟁에 들어간다. 정부는 조합원 총투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에 수차례 복무관리 공문을 보내 연가를 승인하는 학교장도 처벌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연가 투쟁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징계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은 지난 연가 투쟁에 대한 징계가 낮은 게 문제라며 가세했다.

수업권 침해라고?

조합원 총투표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다.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가 갖고 있는 권리다. 또,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로서, 정당한 휴가권 사용이다. ‘집회 참가’ 사유를 문제 삼아 연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은 부당노동행위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국가는 교사들의 쟁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저열하다는 뜻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교사들의 연가 투쟁은 정부 정책에 항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 투쟁 중 하나다.

더욱이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경정 유착과 무능·무책임한 대응, 박근혜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완종과 정권 실세들의 돈 거래 등 썩은 내각 진동하는 부패한 정부가 교사들의 연가 투쟁에 대해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바로 그 정부가 이번에는 세월호 항의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을 1백 명이나 연행하고 유가족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바로 이런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전교조 연가 투쟁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정부의 ‘불법 행동 엄단’ 협박에 굴하지 않고 6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투표율 63퍼센트).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그동안 변성호 집행부는 실무기구 해체를 요구하며 다른 공무원 단체들에게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말고 총력 투쟁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런 집행부의 투쟁 의지에 조합원들이 연가 투쟁 찬성표로 호응한 것이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한두 명씩이라도 연가 투쟁에 참가하자는 결의가 늘어나고 있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예비 교사들, 비조합원 교사들이 편지와 모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가 투쟁을 지지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전교조의 연가 투쟁이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지배 엘리트들이 찬양하는 경쟁·수월 교육이야말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학습권을 빼앗아가고 있다. 숨 막히는 성적 경쟁 때문에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이런 엘리트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저항해 왔다.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교육을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교사들의 노후가 크게 불안정해질 것이다. 그리 되면 경험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려 할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 공격이 성공하면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교육 재정을 줄이고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공격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연가 투쟁의 효과

해의 ‘도피’ 순방을 나가면서도 공무원연금을 꼭 개악하라고 요청할 만큼 이 사안에 필사적인 박근혜를 멈추려면 한 두 번의 집회만으로는 태부족하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파업이 필요했고, 당사자인 전교조도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투쟁인 연가 투쟁이 필요했다. 공무원노조가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면 우리 편의 전력 이 크게 증강돼 승리의 가능성도 더 커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해서 전교조의 연가 투쟁 의미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 지도부가 단호하게 타협을 거부하고 연가 투쟁을 배치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단체 지도자들도 좌파적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공투본은 합의된 양보안을 실무기구에 낼 수 없었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인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특히 전교조 지도부의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본심이 뭘든 간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양보안을 내지 못했다. 물론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직접 양보안을 내지 않고 다른 공무원단체 지도자들의 양보안을 묵인하는 것도 실제로 양보 교섭을 거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실무기구에서 나와 파업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4월 파업을 배치한 덕분에 유동적인 정치 상황에 대처할 정세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항의 투쟁과 부패 스캔들로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기 탈출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것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편이 4월에 아무런 투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들의 위기를 쳐다보기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연가 투쟁 규모만을 갖고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4.24 연가 투쟁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교조는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연금 전투의 주력 부대로 떠오르는 전례 없는 경험을 했다. 변성호 지도부는 진지하게 연가 투쟁을 조직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연금 개악을 통과시키겠다고 버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혀 못 믿을 세력이다. 따라서 4월 24일 연가 투쟁이 연금 전투의 종착역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양대 노총 지도부는 5월 1일 메이데이를 대규모로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5월 2일 대규모 집회를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도 뒤흔을 발휘해 투쟁의 고삐를 한 번 더 잡자.

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박설

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권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악랄함을 자랑하듯 굽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1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노동부문 개혁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바람대로 5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노동시간 개악안이 통과되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이 사안들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명분을 댔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 논의도 결렬된 마당에 비공개 회의에 대한 정부 보고를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관련 법안이 환노위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여야 간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공격이 물 건너간 것은 결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 임금 삭감과 손쉬운 해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5월 중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곧이어 6~7월 중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5월부터 본격화하는 산별·사업장별 임단협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개악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공공부문을 상대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지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공격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악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란을 피해 기필코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의 교훈

바로 이 점에서 노동자 운동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률만큼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산별·사업장별 임단협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투쟁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은 왜 그런지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지도지침,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격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동안, 민주노총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장별 대응으로 방치했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 먼저 취업규칙이 잇따라 개악됐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 상당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거나 수당을 조정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총액임금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일부도 이런 후퇴를 이어갔다. 특히 투쟁의 주축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금속노조는 결국 중앙교섭에서 ‘사업장별 해결’을 합의했다. 금속노조의 주력부대인 현대·기아차 지부는 파업 수위를 제한하며 제 힘을 발휘하지 않았고, 결국 올해까지 협상을 연기시키며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는 계열사와 동종업계 부품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으로 기업주들을 적극 지원하며 힘을 실어 주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각개약진은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선 정부 가이드라인이 매우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전체에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보라.

따라서 정부의 임금 삭감과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에 맞선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법 개악 시도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메뉴얼, 지침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금속·제조 부문 노조들이 구성한 제조공투본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투쟁을 실질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의 위험성을 알리며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이 만든 비극이다

김문성

세월호 선원들 재판 과정에서 출항 당시 과정을 담은 CCTV를 보던 유가족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여객선을 탄다더니 화물선이었어”라는 말이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미지북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승객도 돈 벌어 주는 화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실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일이다. 게다가 2012년에 매입한 세월호로 수익을 올리려면 최대한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했다. 여객운송 업계의 불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청해진해운의 돌파구는 무리한 증축과 일상적인 과적 운항이었다.

선주들이 돈을 내어 만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평소처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안개 낀 밤에 출항을 허가했다.

20년이나 된 데다가 이미 증축으로 배 자체의 복원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세월호였다. 예정 시간을 넘긴 뒤 출항하느라 급하게 과적을 하다 보니 그나마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운 좋게 14시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다. 열악한 처우가 만든 무기력감은 선원들의 책임성도 무디게 만들었다.

이 전 과정에서 정부가 꾸준히 안전 규제를 해체해 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선령 규제 완화, 안전 감독의 민영화, 화물 고박 관련 검사 축소 등.

세월호가 출항해 사고가 나는 과정은 이 사회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들의 이윤 경쟁과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구조 과정을 봐도, 해경 지도부가 포함된 구조 당시 교신 기록은 이들이 제대로 된 구조 매뉴얼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기록마저 나중에 조작해 검찰과 감사원에 제출했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세월호 항로에는 중형 함정이 배치돼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다. 전문 구조대는 이동 수단이 없어서 배가 다 가라앉은 뒤에야 도착했다. 구조의 민영화 자체가 책임 회피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므로 구조 체계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적인 중복 투자로 보였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적 무능은 국가 자체가 ‘생명보다 이윤’이라는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친 뒤에는 구조 작업을 일개 기업에 맡기고는 교신 기록 조작 등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참사 당일 진도 팽목항에 출동한 해경의 다수는 구조가 아니라 유가족 감시에 투입됐다.

평범한 사람들을 천대하고 이들을 위한 치안이나 구조에는 소홀하면서, 고위 통치자들을 보호하고 이런 계급 질서를 지키는 것에는 열심이며, 책임지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모습. 우리가 날마다



정몽헌(왼쪽) 감사

자본과 국가의 합작품 수백만 명이 생중계로 이 비극을 지켜봤다. 이 충격적 참사는 이윤을 위해 인간을 희생하는 자본주의의 일상이 누적돼 일어났다.

보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음모론들은 기획 학살설이든, 잠수함 충돌설이든 뭔가 일탈적 상황으로 세월호 참사를 본다. 음모론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에 기초해 있

다. 그러나 상식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 자꾸 일탈적이고 음험하며 충격적인 원인을 찾게 된다.

물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상식적 생각이 현실에서 배반당했다는 배신감이 때로는 정당한 항의에 나설 근거가 된다.(태극기 소각도 그런 충격과 배신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국가는 법으로 폭

력을 독점해 작동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다.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계급 소속 국민들에게 납세와 병역 등 의무를 강제하지만, 정작 복지, 민주주의, 노동권 등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고 법전에 명시된 것들은 노동계급이 저항하기 전까지는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원래 그토록 잔인하고 비정한 체제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대선 안 되는가

4월 20일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주최로 경찰 탄압 규탄과 시민 피해 상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이기도 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은 이 기자회견을 지지해 여럿이 참가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밝힌 한 사람이 이들에게 ‘운동권이 많이 와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유가족들이 있다. 운동이 지속돼 올 수 있었던 것도 유가족들이 단호하게 진실 규명을 요구한 덕분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광범한 ‘외부 세력’의 연대가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와 우파는 유가족과 광범한 ‘외부 세력’을 분리시키려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시위에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거나 정치 단체나 사회운동 단체들,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순 세력의 개입”, “외부 세력에 의한 정치적 변

질”이라는 식으로 비난해 왔다. 익숙한 상투어들이다.

특히 16일, 18일 집회 후에는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우파 언론의 마녀사냥식 공세도 거세졌다. 아마 그 시민단체 활동가도 여기에 위축돼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보며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안전 문제조차도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에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고, 사고가 나면 구조를 못 받을 확률도 높다. 계급 간에 불평등하게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대형 사고는 대부분 작업장에서 일어난다. 이윤을 만들고 착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장, 건설 현장, 백화점, 철도나 선박 등등. 이런 공간들 대부분이 노동자나 서민 대중이 일하거나 이용하는 공간들이다. 이런 곳들에서 기업주들은 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리려고 노동자를 쥐어짜고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국가는 안전 규

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오래된 건물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라는 돌팔이 ‘항암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안전 산업 육성’을 대안이라고 내놔다. 이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상품화한다는 것이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도우려고 지속적으로 안전 규제를 약화시켜 온 것과도 관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기업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까지도 따져 묻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고, 박근혜 정부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게다가 특별법 시행령 건에서도 보듯 박근혜 정부 스스로 진실 규명 방해 주범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김민아 기자

정치 이 흉악한 정부를 상대로 싸워 진실을 밝혀내려면, 운동은 더 정치적이어야 한다.

참사 이후 이윤 획득을 가장 앞세우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의문과 각성이 커져 왔다. 유가족들 스스로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 줬다.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려면, 더 많은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운동과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와 우파의 협박은 이런 식의 사태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다.

탄압 협박과 외부 세력 개입 운운은 분노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이간시키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급적 각성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좌파들이 세월호 참사에 적극 나서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다.

운동이 정치적으로 비치면 ‘역풍’이 분다는 수세적 태도가 도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사진: 김민준

우선순위 자본가들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코웃음칠 뿐이다. 현대제철의 용광로 작업 모습.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김문성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를 막자”는 호소를 가장 많이, 가장 목소리 높여 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일들이 작업장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3일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쇠파이프 2천 도로 꿰는 용광로에 떨어져 숨졌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이 노동자는 죽어서 시신으로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노조 조사 결과, 쇠파이프 · 호스 등이 널려 있어 미끄러지기 쉬운 작업 공간에 안전 난간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이 이런 처지니, 하청 노동자는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국내에서는 포스코 다음이고, 이제는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해 자산 31조 원, 매출 20조 원으로 세계 철강업체 10위권에 든다는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대제철의 인천공장에서는 지난 3년간 18명이, 당진공장에서는 4년간 건설 노동자를 포함해 스무 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선정한 ‘2014년 제조 부문 살인 기업’이었다.

그런데 더 어이 없는 사실은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 국민대책위, 존엄안전위원회로 구성)이 올해 선정한 ‘10년간 최악의 살인 기업’에 현대제철은 후보에도 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뭘 하는 살인 기업 위에 나는 살인 기업이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 살인 기업

최악의 노동자 살인 기업 후보 5곳은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코레일이었다. 한국 최대 기업들과 정부기관, 대표 기업이 망라돼 있다. 이 중 10년간 가장 많은 노동자를 현장에서 죽게 한 기업은 현대건설(1백10명)이고, 4월 14일 발표한 시민 투표 결과로는 삼성전자 최악의 노동자 살인 기업으로 꼽혔다.

자기 몸이 왜 암 따위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어 간 반도체 공장의 젊은 노동자들, 산재를 숨기려고 11톤 철판에 깔려도 119 구급차가 아니라 트럭으로 병원에 실려 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심한 날은 하루 16시간을 배달하다 과로로 쓰러졌거나 지쳐서 부주의 해지는 순간 일어난 교통사고로 죽고 다치는 우편 노동자들, 인력 감축으로 신호수가 없어서 철도 보수 중에 철도 차량에 치어 죽는 철도 노동자들 등등. 돈도 많고 최신 설비를 갖춘 세계적 대기업들과 정부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운영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세계에서 작업장 사고, 과로 등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하루에 6천 명가량이다. 1년에 2백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이 산재로 죽는다. 4시간 20분마다 한 명 꼴이다.

이 섬 · 한 사망 규모를 설명하려면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수단(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사례들도 모두 이윤을 위해 비용을 최대한 줄여 노동자를 더 많이 쥐어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어디에서나 자본은 ‘이윤보다 인간’이라는 가치에 코웃음을 친다.

국가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정부 예산 중 안전 예산은 1퍼센트도 안 된다.

심지어 (다른 이도 아닌) 소방대원의 안전장갑 구입 예산이 1년에 1인당 한 켄레밖에 안 된다. 소방대원들이 자비로 장갑을 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이 최우선인 체제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기회비용’으로 간주된다. 노동자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속품 취급을 받는 것은 이 미친 우선순위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이 산재 사망도 단지 우연한 불행이 아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죽어 나가고 기업들은 사고를 은폐 · 축소하기에 바쁘다. 정부는 되도록 이런 은폐를 눈감아 준다.

육지의 세월호

예를 들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부상 비율은 낮고 사망률은 훨씬 높다. 산재사망률이 OECD 1위다. 한국만 유별나게 목숨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걸 즐기는 나라가 아닌 바에야 이런 통계는 의심스럽다. 진실은 이렇다. 부상 재해를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기업들의 ‘산재 은폐 매뉴얼’에는 ‘경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2일 이상 병원 처리 안 된다’, ‘회사가 지정한 특정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업체 비용으로 처리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이만 식으로 삼성물산은 5년간 6백22억 원, 삼성전자는 5백97억 원, 현대중공업은 8백52억 원, 현대자동차는 5백4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노동자, 쓰러지다》, 최정, 오월의 봄)

4백10억 원을 감면받은 롯데건설은 지난해 서울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산재 신고를 피하려고 119 구급차를 거부하고 미리 입을 맞춘 특정 병

원 구급차를 부르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돼 ‘살릴 수도 있었던’ 노동자를 죽게 한 바 있다.

건설 노동자를 그토록 경시한 현대제철과 롯데건설이 그렇게 지어진 공장 빌딩에서 노동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사고 월드’라는 별칭이 붙은 제2롯데월드에서는 싱크홀 의혹은 물론이고 건물 균열, 수족관 누수, 이용객이 문에 깔리는 사고 등 부실 시공 문제가 여전하다. 심지어 롯데 측은 출입문이 떨어져 깔린 이용객마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지정 병원으로 데려갔다!

유독 가스 등 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공장도 다르지 않다. 이런 공장은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취급되는 곳인지 알려야 하고 사고 대비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때는 소방대가 단순 화재로 알아 물 뿌리며 대응하다가 막상 가스 밸브를 잠근 것은 사고 8시간이 지나서였다. 이웃한 다른 공장 노동자들은 대피보다 계속 일할 것을 강요 받았다. 이런 일들은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 위험과 사고를 은폐하기 때문에 더 빈번해진다. 삼성, 빙그레 같은 기업들은 노동자가 죽고 나서야 독성 화학 가스가 유출된 것을 당국에 신고했다.

이처럼 산재 사망은 기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살인법을 만들자는 노동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것처럼 말이다. 이밖에도 공익 제보자 보호,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이 필요한 것들이다.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다.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은 노동자 심신의 건강과 안전이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버스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임금이 충분해야 한다. 또한 인격적 대우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를 대놓고 부속품, 노예 취급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안전 규제마저 ‘처부술 원수’로 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위험에 더 노출되게 만들 ‘해고 요건 완화’, ‘임금 삭감’ 따위를 밀어붙이려 한다. 전경련, 경총 등은 이런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

결국 자본가들에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 투자’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 대신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이 세월호를 포함해 곳곳에서 갖은 위험을 떠안도록 내몰고 있다. 그래서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안전이냐 이윤이냐’)는 계급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짜 안전 사회를 이루려면 자본의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직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 그 힘만이 국가에게도 진정으로 도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 대다수를 단결시킬 수 있다면,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1백88명이 숨진 사건을 국제 노동계가 추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겠다며 밖에서 공장 문을 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2015년 노동자 투쟁

김하영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내놓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2014년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 궤도에 올려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규제완화 “열풍”을 일으키며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등의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라는 압초에 부딪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끔찍한 위험으로 몰아넣는지 밝히 보여 줬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모질게 뿌리치며 “경제 활성화” 타령을 하더니, 다시금 연말에 노동자들을 정조준한 공격 종합패스트를 내놓은 것이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의 핵심 내용은 “핵심분야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주요국 구조개혁 사례를 들며 “생산요소와 관련된 금융·노동·교육개혁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 구체적인 과



재벌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다. 생활임금·고용안정을 위해 싸우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부문의 민간 투자 확대(즉, 민영화) 등을 꼽았다. 노동분야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곧이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에 더 자세히 담았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히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공격이다. 정부는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 임금체계를 문제 삼으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전자는 고령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후자는 개인별 임금결정구조를 강요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 삭감을 노린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를 앞두고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버리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정상화를 막으려는 것도 장시간 노동체제를 부르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도 임금 삭감 효과를 낸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간 제한을 2년보다 완화해 4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고, 파견 허용 제한도 완화하려 한다. 55세 이상과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에게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려 하는데, 그러면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그 대상이 된다. ‘고소득 전문직’에는 교사와 간호사 같은 여성 비율이 큰 노동자군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파견근로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사내하청 합법화도 노리고 있다. 파견법 적용 대상 확대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재벌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해고 규제 완화다. 지난해 말 쌍용차 법원 판결로 정리하고 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정부는 통상해고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정계해고나 정리해고보다 손쉬운 실적 부진자(저성파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한미 디로 말해, 고용주가 원할 때 고용했다

가 노동시장의 조건이 달라지면 내던져 버리겠다는 얘기다. 2016년 정년연장이 의무화된 자칫 해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업무 평가에 기초한 저성파자와 해고제는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대한 보복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취업규칙 불이의 변경에 대한 제한 회피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과반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지침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기업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으로,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입법권 침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지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또는

개별 노동자들을 압박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위와 같은 공격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려 한다. 이미 정부는 업무 저성파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과 단협이 그 대상이 된다. ‘고소득 전문직’에는 교사와 간호사 같은 여성 비율이 큰 노동자군도 포함된다.

또, 정부는 파견근로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사내하청 합법화도 노리고 있다. 파견법 적용 대상 확대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재벌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해고 규제 완화다. 지난해 말 쌍용차 법원 판결로 정리하고 요건이 완화된 데 이어, 정부는 통상해고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정계해고나 정리해고보다 손쉬운 실적 부진자(저성파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한미 디로 말해, 고용주가 원할 때 고용했다

가 노동시장의 조건이 달라지면 내던져 버리겠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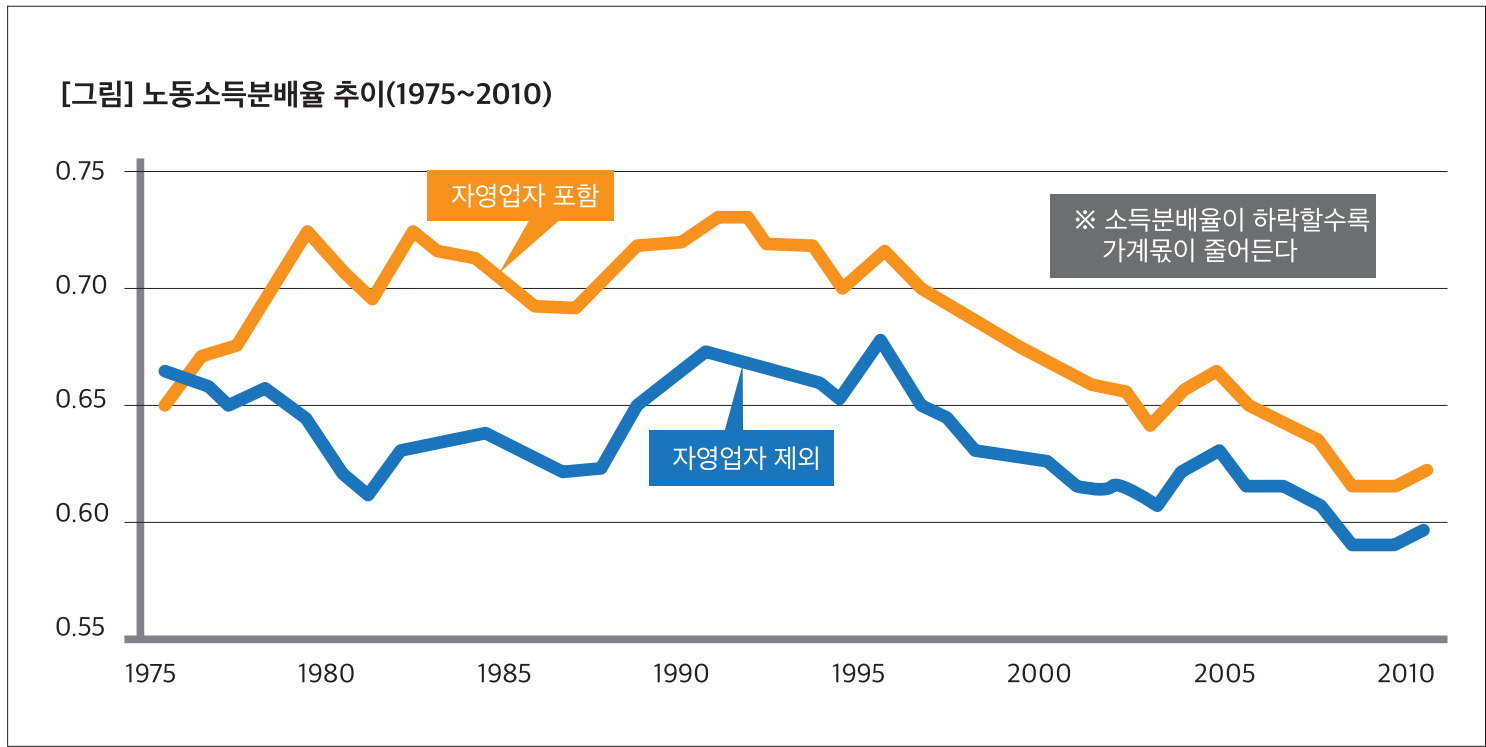
2016년 정년연장이 의무화된 자칫 해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업무 평가에 기초한 저성파자와 해고제는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대한 보복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취업규칙 불이의 변경에 대한 제한 회피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과반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지침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기업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으로,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입법권 침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지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또는



박근혜 정부 등장 자체가 노동운동을 제압해 심각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기 위한 지배계급의 일처 단결한 대응이었다.



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일처 단결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전례 없이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대처하려면 노동운동을 제압해 신자유주의 조치를 밀어붙여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길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국판 마거릿 대처가 되기를 바란 것이다. 대처 사망 2주년을 맞아 우파 신문과 경제지들은 다시금 대처가 추진했던 민영화, 규제완화, 노조 공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전 재정경제부장관 강봉균은 “노동개혁을 위해”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과 노동 개혁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계급의 기대에 부응하며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을 다짐한 것이다.

저들이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 않고 세계 시장에

서 입지를 지키려면 착취율을 높이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종종 유럽 국가들의 구조개혁을 사례로 드는데, 유럽 지배자들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즉, 미국과 동아시아 신흥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후에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등의 양보 조치들을 빼앗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특히 독일 모델에 주목하는데 그것이 노동자들의 임금 공격을 경기 침체를 딛고 수출 경쟁을 재건한 케이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정규직에 유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며, 해고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제와 파견 근로 제제도 완화했다. 그 결과 ‘미니잡’과 파견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무려 22퍼센트로 늘어났다.

한국도 대표적인 수출 경제인데, 저금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는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의 급속한 증가 덕을 봤는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즉, 미국과 동아시아 신흥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후에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등의 양보 조치들을 빼앗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특히 독일 모델에 주목하는데 그것이 노동자들의 임금 공격을 경기 침체를 딛고 수출 경쟁을 재건한 케이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정규직에 유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며, 해고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제와 파견 근로 제제도 완화했다. 그 결과 ‘미니잡’과 파견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무려 22퍼센트로 늘어났다.

한국도 대표적인 수출 경제인데, 저금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는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의 급속한 증가 덕을 봤는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고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즉, 미국과 동아시아 신흥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후에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복지 등의 양보 조치들을 빼앗기 시작했던 것이다.

면된다 그에 대한 반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한편으로는 사기극으로 끝날 립서비스(임에 발린 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기에 의존한다.

주로 노동대중의 후진층을 겨냥하는 박근혜의 립서비스는 이미 사기극으로 드러난 게 많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늘지고(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등의 대선 공약이다. 박근혜는 집권 몇 달 만에 이런 공약들을 사실상 내뱉었다. 박근혜 대선공약의 30퍼센트가 일자리와 노동분야 공약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취임 초기에 일가에서는 그가 각종 노동자들에게는 시혜를 베풀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일자리·노동공약 가운데 이행된 것은 60세 정년연장 정도인데, 그나마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이 한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임금서비스의 최신 버전은 아마도 경제부총리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언급일 것이다. 최경환은 지난 3월 초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진정한 이유는 환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것이었다.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말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도 뒤따르지 않았다. 최경환은 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에도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기업 사내유보금이 가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정부는 노동시

장 구조 개혁을 통해 임금 공격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노사정위에서 다루는 3대 핵심 과제는 최저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들이다(통상임금·범위 협소화; 노동시간—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한편,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추진 방안의 기본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사회적 복지의 미비를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상대적으 로 나온 조건, 상대적 고용안정, 그리고 기업 복지의 탓으로 돌린다.

이것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부제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라고 불린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란 바로 정규직의 “과보호”를 푸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마치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견고하게 독점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상향 이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1997년 금융 공황 이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치르게 하려고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주들이었다. 지배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싸고 ‘유연한’ 노동자를 원했던 것이기 쉬운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고 워킹 푸어(노동빈곤층)가 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들은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요컨대 노동의 몫이 줄고 자본의 몫이 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신자유주의 처방이 내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진다. 물론 한국 경제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이어서 경제 성장의 고용 효과가 매우 낮은 것(고용 없는 성장)이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가에서는 재벌 대기업들이 외주화와 하도급 노동자 착취를 통해 얻은 과실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눠먹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하도 상식처럼 퍼져 있어 심지어 노동운동 내에도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적잖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다. 대기업 일일수록 노동소득배에 인색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2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49.9퍼센트로, 한국 전체 평균 노동소득분배율 59.7퍼센트에 비해 10퍼센트나 낮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재벌들의 시혜 덕분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 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정이환 교수에 따르면, 1996년 6퍼센트 내외이던 노조 부문 ‘임금 프리미엄’은 2002년 15퍼센트로 증가했다. 요컨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더 잘 방어해 온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업주들은 노동조합을 패해 그 바깥에서 더 싸고 자르기가 쉬운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던 것이다. 그레 놓고는 이제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정규직 “과보호”를 깨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유(有)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요컨대 노동의 몫이 줄고 자본의 몫이 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신자유주의 처방이 내

려진 지난 20여 년 동안의 근본적 변화이고 근본적 문제다.

물론 노동자들 내부의 격차가 증대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독과점화에 따른 기업 규모와 지불 능력의 격차, 서비스업 비중 증대 같은 산업 구조 변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등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1997년 위기 이후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훨씬 더 심화돼, 경제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 2000년대 들어 재벌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전체 대기업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 됐다. 최근 통계를 보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30대 그룹 전체의 무려 8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47.5퍼센트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그런데 이런 재벌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도급, 외주화를 광범하게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다. 삼성·현대차·SK·LG 등 10대 재벌그룹 계열사의 노동자는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간접고용 비율이 매우 높은데, 현대중공업이 60.9퍼센트, 포스코가 46.6퍼센트, 삼성이 32.6퍼센트, GS가 29.7퍼센트, 현대차가 28.2퍼센트이다(2014년). 대기업들이 이처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바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진다. 물론 한국 경제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이어서 경제 성장의 고용 효과가 매우 낮은 것(고용 없는 성장)이 좀 더 근본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가에서는 재벌 대기업들이 외주화와 하도급 노동자 착취를 통해 얻은 과실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눠먹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하도 상식처럼 퍼져 있어 심지어 노동운동 내에도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적잖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다. 대기업 일일수록 노동소득배에 인색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2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49.9퍼센트로, 한국 전체 평균 노동소득분배율 59.7퍼센트에 비해 10퍼센트나 낮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재벌들의 시혜 덕분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직해 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 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가 임금과 노동조건 격차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정이환 교수에 따르면, 1996년 6퍼센트 내외이던 노조 부문 ‘임금 프리미엄’은 2002년 15퍼센트로 증가했다. 요컨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더 잘 방어해 온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업주들은 노동조합을 패해 그 바깥에서 더 싸고 자르기가 쉬운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던 것이다. 그레 놓고는 이제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정규직 “과보호”를 깨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유(有)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요컨대 노동의 몫이 줄고 자본의 몫이 늘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신자유주의 처방이 내

▶ 10원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장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같은 이유로 공격한다.

그러나 정규직 ‘과보호’를 깨겠다는 정부 대책은 단지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전체 노동자의 7.4퍼센트에 불과하다)만을 겨냥하는 게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추진은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령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겠다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손보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노조·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법이 포함하고 있는 보호 장치를 잃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용자와의 세력관계에서 더 취약한 이들이야말로 노동조건 악화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골적인 비정규직 제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조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차 노동시장”(좋은 일자리)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기는커녕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벤치마킹 하려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 파견 노동자와 노동빈곤층이 대폭 늘었고 노동자들 전반의 생활수준 저하와 노동조합 약화로 이어졌다.

물론 정부와 사용자들이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저 말로만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각에서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은 어차피 개별 노조의 단체협약을 통해 방어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1차 ‘정상화’ 공격으로 지난해 이미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됐다. 지금도 정부는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체계에 개편이나 해고요건 완화 공격에서 결코 비껴나 있지 않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저성과자 해고는 KT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이 추진하려는 상시 구조조정에 이용될 것이다.

요컨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특정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동계급이 가져가는 몫을 줄이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계급의 단결을 이룰 수 있을까?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을 가로막고 각개격파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부문들에 파상공세를 가하면서도 그것이 연대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말이다. 특히, 박근혜는 잘 조직돼 있는 대기업 정규직(대공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고립시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박근혜의 공세에 노동자 단결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기세 좋은 투쟁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조직화에 나서도록 고무할 수 있다 4월 1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

로 맞서는 것이다. 그러려면,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공격의 칼날이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 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설사 공격의 양상이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되거나,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부문을 먼저 공격해 그것을 지렛대로 공세를 확산하는 방식을 취할지라도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정규직 “과보호”, “특혜”, “철밥통” 이데올로기 공격에 얼마나 잘 맞서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공무원연금, 기업 복지가 관참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단체협약, 청년 신입사원보다 꽤 높은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문제 삼으며 공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 노동자들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과 조직화를 위해서 연대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한 부문이 공격당하

는 것을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방관한다면, 심지어 한 부문의 특혜가 사라져야 내 형편이 나아진다고 여긴다면, 노동자들은 각개격파 당하기 십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단결이 중요한 이유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의 지렛대가 되고, 공공부문 ‘방만’ 비난은 민간기업의 노동조건 악화 압력으로 작용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고 자신감을 얻을 때 더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연대 투쟁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기세 좋은 투쟁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과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고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부를 보면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 “특혜”, “철밥통”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말로는 반대한다지만, 진지하게 그들의 조건을 방어하기를 수줍어 하고 그것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조건을 방어하는 일이라고도 믿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퍼져 있다. 여기에는 조직 노동자,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깔려 있고, 이는 노동계급의 단결에 대한 회의로도 연결된다. 즉, 대부분이 대기업 정규직인 조직 노동자들은 높은 소득과 생활수준을 누리며 예전의 전투성을 잃고 보수화했고, 신자유주의에 포섭돼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온건한 진보 사회학자들, ‘프레카리아트’론을 수용하는 단체와 개인들, ‘다중’을 내세우는 자율주의자들,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을 더는 프롤레타리아로 볼 수 없다는 초좌파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이에 다양한 정도로 타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와 기업주들의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자 공격을 진지하게 방어하고 연대하기 어렵다. 살 만한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거나, 심지어 정규직 노동조건 방어는 결국 하청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노동계급 내부 격차를 더 벌릴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관해 그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도 정규직 노동조건 방어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어차피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 때리기는 이데올로기 공격일 뿐이고, 실제로는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정한 노동조건 공격을 당하고 있다. 가령 지금 공무원들이 연금 공격을 받고 있고, 철도 노동자들이 근속승진제 폐지 공격을 받고 있고,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연공급제 폐기와 성과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공격을 받고 있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규직 공격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상 사용자와 정부의 정규직 노동조건 공격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좌파 활동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노동운동의 중심 과제로 삼기를 꺼린다. 심지어 통상임금을 확대하거나 기업 복지를 지키려는 요구를 터부시하는 경우마저 있다.

그러다 보면 노동조건 개악을 일부 수용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타협에 맞서며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노동조건 개악을 저지하려 하기보다 협상을 통해 손실을 일부 벌충하는 방식을 흔히 취해 왔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손실을 일부 벌충하며 제도 개악을 수용하거나, 신규자들의 노동조건 개악을 내주는 식의 타협이야말로 부문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앞세우다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와 달리, 좌파 활동가는 정규직 노동조건을 일관되게 방어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을 좌우하는 제도 방어와 개선에 앞장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조직 노동자들이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투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조직화의 전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에 맞서 우리 쪽도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위 ‘프레임 전쟁’에서 밀린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노동계급 내부 격차의 해소는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절대적 몫을 늘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노동계급 내부 격차 줄이기를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보론’으로

귀결되기 쉽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해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조건 개선에 사용하자든지, 임금 삭감을 감내하고 일자리를 쫓게자든지 하는 식으로 노동계급 내부의 나눔만 생각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격차 증대를 감추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사내유보금 사용을 통한 정규직화, 정부 책임 강화를 통한 공적 연금 강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등처럼 노동계급의 절대적 몫을 늘리는 것이 노동운동의 요구가 돼야 한다.

돈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 한 통계를 보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522조 원의 0.8퍼센트만 사용해도 이 기업들에 고용된 비정규직 43만 명을 정규직화하고 연봉도 대폭 올릴 수 있다. 또,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고용률을 76퍼센트로 올릴 수 있다.

누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을 말하는 듯하지만, 이것을 진지하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신자유주의로 노동계급이 변해(내부 격차 증대) 하나의 계급으로서 단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퍼져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노동계급 내 상이한 부문 간 단결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투사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진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2015년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변수 하나는 지난해 연말 선거에서 16년 만에 좌파 지도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상균 후보조는 62.7퍼센트 투표율을 기록한 1차 투표에서 국민파-중앙파-전국회의 연합선보 후보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결선에서도 승리를 거머쥔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 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조합원들은 박근혜의 전면적 공세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잘 싸울 지도부를 원했던 것이다. 철도파업과 민주노총 본부 침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전 민주노총 집행부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점과 함께, 2015년 박근혜와 한판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맞물린 것이다. 77일간의 공장 점거라는 한상균 후보의 전투적 전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한상균 집행부는 당선 직후 4월

어떤 경우에도 노동계급 내 상이한 부문 간 단결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투사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진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2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파상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하반기 총파업도 예고했다. 박근혜의 집요하고 전면적 공세 양상을 보면 하루 총파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좌파 활동가들은 4월 24일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이후 투쟁을 더욱 전진시키는 도약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운동 안에는 4·24 총파업을 비롯한 2015년 투쟁에 대해 회의적인 활동가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민주노총의 조직력과 조합원들의 상태가 총파업을 할 정도가 되느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상대적 우파로부터 뿐 아니라 초좌파 진영으로부터도 나온다. 결국 ‘뺑파업’ 되고 현장에 실망감만 줄 게 뻔하다며 환상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높아 스스로 투쟁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두 해 동안의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면, 철도파업과 전교조 규약시정 거부 투쟁 등 잠재력을 보여 줬다. 또, 스스로 투쟁에 나설 자신이 없는 조합원들일지라도 지도부가 소명하는 총파업에는 나설 수 있다. 혼자 싸우다 고립될까 움츠렸던 조합원들도 다 합

께 파업에 나선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투쟁 근육을 키우다 보면 스스로 더욱 전진할 힘도 얻을 수 있다.

4·24 총파업의 주도력은 민주노총 신입 지도부로부터 나왔다. 현장 조합원들의 강력한 압력에 떠밀려 준비된 것은 아니다. 1905년 러시아나 1968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총파업처럼 아래로부터의 주도력과 에너지가 충만한 혁명적 파업이 아니라 위로부터 조직된 관료적 파업이다. 그러나 이것이 4·24 총파업에 회의적이거나 무심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 자발성이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위로부터 총파업을 선언하는 게 오히려 계급투쟁과 노동자들의 자신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전체 노동계급의 처지를 악화시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조합원들을 총동원하는 투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일 것이다.

진지한 활동가라면 총파업이 성사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식의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좌파 지도부가 등장해 총파업을 선언한 현 상황을 노동자 운동의 일보 전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파업 호소에 응해 기층 조합원들이 실제로 파업에 나서도록, 그리고 스스로 투쟁에 나섬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는 2008년 위기 이후 지난 5년 동안 32번의 총파업을 경험했다. 처음에 좌파들은 투쟁으로 긴축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으니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컸다. 그러나 2009년에 벌어진 첫 총파업에서 반자본주의 좌파가 결정적 구실을 하면서 기층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애썼다. 이것이 압력이 돼 공산당도 자기 영향력이 있는 노조를 움직이는 등

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처음에 관료적 파업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아래로부터의 에너지가 충만해졌다. 혁명적 좌파가 노동조합 지도부의 총파업 선언을 활용해 현장 조합원들의 주도력이 발휘되도록 애쓴 것이 이런 발전에 일조했다. 이런 그리스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노동조합 좌파 지도부가 등장해 투쟁을 호소하는 상황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협력해 투쟁을 성사시키도록 애써야 하는데, 그 목적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다. 좌파 지도자들이 잘 싸워 줄 것이라고 믿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투쟁에 나섬으로써 사기를 회복하고 기층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야 한다.

또, 좌파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좌파 지도부의 등장을 이용해 산하 산별연맹과 대형 노조들에서도 투쟁을 조직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 2015년 투쟁 계획을 둘러싼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의 분열은 관료적 통제와 약화를 낳을 수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를 활용해 산별연맹과 대형 노조들에서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민주노총 신입 지도부의 2015년 투쟁 계획이 공문구가 되지 않으려면, 산별연맹과 대형 노조들이 싸우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산별연맹과 대형 노조들은 민주노총 투쟁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경우가 적잖았다. 이런 때, 투쟁 계획 실행에 비협조적인 산하 노조 지도부를 민주노총 지도부가 상층 차원의 내부 논의를 통해 설득하려 하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다.

두 가지 과제가 맞물려야 한다. 하나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산하 노조 지도부의 투쟁 회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참여 같은 뜨거운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산하 산별연맹이나 노조의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실질적인 투쟁 조직에 나서는 것이다. 투쟁 조직에 뜻뜻미지근한 자신의 노조 집행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갖도록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 둘은 서로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 호소를 기층의 투쟁 조직에 활용할 수 있고, 기층에서의 이런 활동은 노조 지도자들 사이에서

좌파 지도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물론 현재 기층의 활력이 충분하지 않고, 현장 활동가층이 두텁지 못한데다 사기도 좋지 않아 어려움이 적잖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집행부 배출을 주된 목표로 삼아 활동하면서 현장에 공백이 빚어진 것이 이런 문제를 낳은 한 요인이기도 하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층의 활력이 중요하다. 기층의 활력은 좌파 지도자들에게도 압력이 될 수 있다. 좌파 지도부의 등장은 투쟁에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열쇠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다. 좌파 지도자는 매우 훌륭한 투사일지라도 노동조합 관료 전체의 규범에 순응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점을 좌파 활동가들은 알아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의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투쟁도 해 나갈 수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근시안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활동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좌파 활동가들은 투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이간질에 맞서 노동계급을 단결시키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앞에서 충분히 다뤘다. 또, 투쟁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정치적 대응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령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하지 못하도록 실무기구 탈퇴와 파업 참가를 압박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노동 쟁점과만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나 정권의 부패 규탄 같은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 한반도 불안정 같은 제국주의 문제 등도 중요하다. 지금은 정치적 불안정이 큰 시기이므로 좌파 활동가들은 정치적 쟁점들을 이용해 산업 현장에서 투쟁 가능성을 높이도록 애써야 한다.



활동가들은 좌파 지도부의 투쟁 호소를 기층의 투쟁 조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권영우 기자

추천 소책자



2015년 정세 전망과
좌파·마르크스주의자의 과제
노동자연대 편집팀 엮음, 5,000원, 176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세계경제, 굴뚝이 기어 가는 속도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이다. 4월 17~18일 IMF 총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그 자리에서 라가르드는, [영국 재무장관으로 긴축을 추진하는] 조지 오스본이 영국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개혁” 요구를 “달성” 하라고 그리스에 촉구하며 자신이 보수 정치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라가르드의 전임자들인 로드리고 라토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 법을 어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라가르드 자신은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니콜라스 사르코지에게 큰 돈을 기부한 사람 편을 들[어 그가 재판에서 승리하게 했]었다는 혐의이다.

그러므로 IMF는 서구 자본주의의 본질을 매우 잘 보여 주는 상징이다. 즉, 세계를 지배하지만 온갖 부정으로 뒤덮인 체제 말이다.

IMF는 대체로는 신자유주의를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그러나 2007~08년 금융 위기 이후 IMF는 세계경제가 잘 굴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IMF가 반년간지 《세계경제 전망》 최신호에서, [2007~08년의] 경제·금융 위기가 세계적 [경제] 성장에 항구적 손상을 가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수록한 까닭이다. 라가르드가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와중에 말이다.

그 연구는 잠재생산량 증가율의 추이를 추적했다. 잠재생산량은 물가인상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



임금·연금·복지 삭감 등 긴축을 강요하는 IMF의 미친 도끼질.

는 생산 수준을 뜻한다.

그 연구 결과는 이렇게 예측했다. 선진국 경제에서 잠재생산량 증가율은 2008~14년 연평균 1.3퍼센트에서 2015~20년 1.6퍼센트로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수치는 위기 이전인 2001~07년의 2.25퍼센트보다 한참 낮다.

IMF는 중국·인도·브라질 같은 “신흥국” 경제의 성장도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나라들의 잠재생산량 증가율은 2008~14년 6.5퍼센트에서 2015~20년 5.2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수치들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까

지 나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만약 IMF의 예측이 옳다면, 부유한 나라들의 경제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 수준은 2008~09년 대불황을 포함한 시기의 성장률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는 뜻이 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 회복 속도가 “굴뚝이 기어 가는” 수준이라고 썼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두고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최고 경제 자문이었던 로런스 서머스는 “장기 침체” 이론을 부활시켰다. “장기 침체”는 1930년대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지지자들이 처음으로 썼던 말이다.

서머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이 저성장의 원인이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지출을 늘이는 것을 처방으로 내놓았다.

좌파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이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가까운 제임스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문제의 근원은 매우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국방력의 쇠퇴와 저유가의 종말이 문제의 요인이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장기 침체의 요인으로 제시한

다. 기술 혁신의 둔화와 서구 세계의 노령화 등이 그 사례들이다.

신자유주의의 보루인 IMF조차 이제는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인정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흥미롭다. 그러나 IMF가 내놓을 처방은 뻔하다. 라가르드가 그리스에 요구한 것 같은 친시장적 “개혁”을 더 하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처방은 진실에 근접한 것일 수 있다. 오늘날 “개혁”이란 한마디로 조직 노동자들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착취 증대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온갖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성장이 왜 더딘지에 대해 마이클 로버츠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놓은 설명과 잘 어울린다. [2008~09년의] 대불황과 뒤이은 침체의 근저에는 주요 자본주의 경제들에 모두 영향을 끼친 장기적 이윤율 저하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위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쥐어짜려 했다. 그래도 이윤율이 투자를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오르지는 못했다. IMF가 추산하길, 2008~14년 선진국 경제의 민간부문 실제 투자는 2007년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25퍼센트 낮았다.

기업들은 돈을 생산적 투자에 쓰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밀어 넣고 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중국에서 주식시장 거품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머스처럼 노련한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가 나서 경제를 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접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50호 / 번역 차승일

남아공

새 노동자 정당 건설로 한걸음 내딛다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분열하면서 새로운 좌파 정당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급진적 세력이 모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켄 올렌데가 전한다.

4월 셋째 주에 열린 ‘사회주의를 위한 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 노동자 정당 건설 계획이 한걸음 전진했음을 보여 줬다.

민주좌파전선(DLF) 대표로 회의에 참가한 트레보 응웨인은 “아주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말했다.

금속노조(NUMSA)가 조직한 이 회의에는 단체 11곳을 대표해서 약 1백 50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남아공의 사회적 위기가 첨예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민들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들이 큰 파장을 낳았고, 남아공의 주요 노총인 코사투는 사무총장 즈웰린지마 바비를 제명한 이후 커다란 분열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는 새로운 사회주의 경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주민을] 살인하고 [그들의 상점들] 약탈하는 야만적 소수가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바비는 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가 코사투에서 제명된 것은 남아공에서 새로운 좌파가 생겨나면서 일어난 균열의 일부이다.

집권당 ANC와 그 동맹인 남아공공산당, 그리고 대부분의 코사투 지도부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금속노조 특별 대의원

대회는 ANC가 아닌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하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진행 속도가 더딘 것 때문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걱정을 했다.

다음은 또 다른 DLF 대표 레하드 데사이의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회의를 두고 금속노조가 그들의 과거 결의안(이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 때문에 구석을 맞추려고 개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새 정당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르면 10월에 새 정당을 띄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새 정당 건설은 금속노조의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남아공에서 새로운 급진화의 중심이 된 두 세력이 참가하지 않은 것

이다. 하나는 줄리우스 말레마가 이끄는 경제자유투사당(EFF)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 다섯 달 동안 파업해 세계 백금 시장을 들었다 놓으며 최종 승리한] 백금 광원들이다.

“아주 거대한 세력들이 빠져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우리가 그 세력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 돼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그들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트레보 응웨인은 이주민 혐오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했다.

“혐오 범죄가 생겨난 배경에는 많은 흑인 노동자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중간계급 사람들[이주민 상점 주인들이 혐오 범죄의 주요 대상이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죠.

“노동계급의 평범한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정치의 최전선으로 가

져와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회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회원과 소속 단체 모두에게 작업장과 지역 사회에서 이런 잔인한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대를 건설하라고 요청한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전 세계와 아프리카 전역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지지와 연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주민 혐오, 빈곤, 실업,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문제에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바로 사회주의이다. ...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나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50호 / 번역 김종환

나치 황금새벽당 재판에 맞춰 파업과 항의 시위가 일어난다

데이브 수엘

4월 20일 아테네 코리달로스 교도소 앞에서 성난 군중이 행진을 벌였다. 교도소 안에서 열리는 나치 황금 새벽당에 대한 첫 재판에 맞춘 시위였다.

많은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행진에 참가했다. 공공부문노총 ADEDY를 포함한 노동조합들이 전국 4시간 파업을 호소했고 아테네 시는 업무를 중단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의 스틸리오스 미카엘리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집회는 컷습니다. 사람들은 나치는 수감하고 이민자는 합법화하라고 외쳤습니다.”

ADEDY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가 이끈 대열은 코리달로스 교도소 앞에서 공산당이 이끈 행진과 집권당인 시리자가 이끈 행진과 만났다. 안에서는 황금새벽당의 지도적 당원 69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2013년 9월에 발생한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힙합 가수인 파블로스 피사스 살해 사건, 그 며칠 전에 발생한 공산당 소속 노동조합 활동가들 폭행 사건, 2012년 이집트계 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등을 다뤘다.

범죄 조직

앞으로 재판부는 1백 건이 넘는 공격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며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 사건들 중에는 2013년에 발생한 파키스탄계 이주노동자 셰흐자드 루크만 살해 사건도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황금새벽당 지도자들은 장기 복역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자 변호사인 타나시스 캄파지아니스는 앞에서 말한 이집트계 어업 이주노동자를 변호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죄 판결은 우리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황금새벽당이 합법 정당이 아니라 나치 강패 집단이라고 20년 동안 주장했습니다.



“나치는 수감하고 이민자는 합법화하라” 4월 20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이 코리달로스 교도소 앞에서 조직한 반파시즘 행진

“유죄 판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황금새벽당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파블로스 피사스 살해 이후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일어나자 사법당국은 마치 못해 황금새벽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판은 거의 1년 반이 넘도록 잡히지 않았고, 재판과 관련하여 매우 논쟁적인 쟁점들도 많다.

예를 들어 반파시즘 활동가들과 코리달로스 지자체 의원들은 재판 장소를 교외의 교도소가 아니라 아테네 중심부로 옮기기를 바란다. 교외의 교도소는 시위대와 언론의 접근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 황금새벽당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중에는 테러방지법이 있는데 파시즘 반대 성향의 변호사들은 테러방지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시즘 반대 성향의 변호사들은 황금새벽당과 국가의 유착관계도 들춰내려 애쓰고 있다. 캄파지아니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피고로는 경찰관 한 명과 군인 두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파블로스 피사스 살해 사건은 적어도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경찰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황금새벽당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파업과 항의 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이 질질 끌리면서 운동이 가라앉아 이 문제가 정부의 손에만 남겨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시리자 지도부는 대체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황금새벽당에 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황금새벽당이 우파로 가는 표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

이죠. 하지만 나치의 위협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리자 정부는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에 우파를 앉혔습니다. 그들은 나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억압적 ‘심층 국가’(deep state, 국가의 핵심부에 있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파시즘 반대 운동은 ‘심층 국가’에도 도전해 이런 연계를 끊어 내야 합니다.”

시위대가 재판정을 향해 행진하는 도중에 소수 나치들이 시위대와 증인들을 공격했다. 공격받은 사람들 중에는 파블로스 피사스의 친구 두 명도 있었다.

황금새벽당에 대한 재판은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일은 5월 7일이다. 집회 연설자들은 다음번에도 항의 시위와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다

4월 20일 에게 해에서 그리스, 미국,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다. 에게 해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놓인 바다이다.

이 군사훈련을 앞두고서 그리스 국방부는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과 5백만 달러 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돈은 지난달 그리스 국회가 [경제위기와 긴축으로 말미암은] 인도적 위기 해결에 쓰기로 결정한 돈의 두 배가 넘는다.

이 계약은 국방장관 파노스 카메노스가 밀어붙인 것이다. 카메노스는 그리스 연립정부에 포함돼 있는 강경 우파 정당인 그리스독립당의 대표이다.

학생들의 점거 운동을 공격한 경찰

4월 17일 아침 아테네대학교에 경찰이 들이닥쳐 점거 운동을 벌이던 학생 14명을 체포했다.

이 공격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왜냐하면 1974년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경찰은 대학 캠퍼스에 잘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리자에 “질서” 유지 능력을 보이라는 우파의 압력이 있는 뒤에 이번 경찰 공격이 벌어졌다.

아테네대학교 학생들의 점거는 수감된 아나키스트들에게 지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2주 넘게 지속됐었다.

새 금광 운영에 반대하는 행진

4월 16일 아테네 중심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쿠리스 금광 개장에 반대해 행진을 벌였다. 스쿠리스 금광은 그리스 북부 할키다키에 있다.

혁명적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의 지지자들도 이 행진에 참가했다.

금광 개장에 찬성하는 시위도 있었다. 이 시위는 사용자들이 부추긴 것이었다.

이 금광에서 채굴이 시작되면 심각한 환경 파괴를 낳을 것이고, 그에 따라 반대 의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시리자는 그리스로의 “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국내의 지배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50호 / 번역 차승일

시리자에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지배자들

유럽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굴욕적으로 타협한 [2월 20일 합의] 이후 두 달 동안 이어진 “중요한” 대화들에서 이런 위협은 계속됐다.

유럽 지배자들은, 시리자가 노동자들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자신들의 성에 잘 만큼 강하게 밝히기 전에는, 그리스 정부에 주기로 이미 결정

된 바 있는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주지 않으려 한다.

유로존 재무차관 회의가 잡힌 4월 22일은 그리스가 새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담은 4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그리스에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줄지 말지가 논의되는데,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많다.]

[이 난관을 넘기더라도] 앞으로 큰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는 5월에만 IMF에 10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7월과 8월에는 유럽중앙은행에 67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시리자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IMF 총재,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친긴축 시민주의 정부들 가운데서 강력한 독일 정부에 함께 맞서 줄 동맹이 나타나길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

스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서두르라고 요구하는 데서는 한통속이다.

시리자는 빚을 디폴트[채무 불이행]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 빚은 투기 행각을 일삼다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느라 생긴 것인데 말이다.

빚을 디폴트하지 않으면, 시리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디폴트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성과급제 도입, 취업규칙 개악 중단하라

고은이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81.4퍼센트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 3백여 명은 병원 측의 성과급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성과급제로 바뀌면, 공공병원의 노동자들이 (성과를 내려고) 국민에게 의료를 상품으로 팔아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성과급제 도입은 노동자들 사이에 실적 경쟁을 유도해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안 그래도 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환자들을 봐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난해 5월에는 환자식 조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인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연장근무와 특근을 반복하다가 과로사 했다. 야간에 검사실을 지키다가 사망한 노동자도 있다.

성과급제 도입은 과잉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공공의료



“멈춰 성과급제 가자 공공의료” 이 투쟁은 2차 ‘정상화’에 맞선 공공부문 투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도 악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은 같은 수술도 로봇 수술로 하면 담당 의사에게 건강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신설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소연

서울대병원장 오병희는 이런 식의 의사 성과급제를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입한 자다. 그는 이제 노동자들에게 까지 대상을 넓혀 성과급제를 병원 전체에 확대 시행하려 한다.

또, 병원 측은 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폐지하고, 휴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를 폐지·축소하려고 한다. 시급 계산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하고 통상임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정기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일방

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했고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르며 직원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아 단협을 대체하려 시도해 왔다.

이 같은 임금 체계 개악, 복지 삭감, 취업규칙 개악을 통한 단협 무력화 시도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이 투쟁은 2차 정상화에 맞선 공공부문 투쟁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렇게 연설했다. “오늘 동지들의 총파업은 선도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공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박설

박근혜 정부가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의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1백인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협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강성 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의 걸림돌’이라며 비난을 퍼부어 왔다. 공공부문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단협에 명시된 쟁의권, 기업 복지 등을 후퇴시키는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 단협 개악 시도가 핵심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해고나 전환배치 등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전환배치, 정리해고, 사업 분할·합병·양도·휴폐업,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단협 조항들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항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 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는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들

이 투쟁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망을 허물려는 악랄한 공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부추기는 **아비한 이간질**도 시도하고 있다. 1백인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 30퍼센트가량에서 ‘조합원 가족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고 과장하며 “사법처리” 위협을 한 것이다.

정부는 위선적이게도 자신들이 늘 깨무시는 “평등”, “차별 해소”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미사여구와 달리, 정부의 간섭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정부와 회사에 **길들이려는 공격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단협 조항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간질

따라서 정부의 단협 시정 개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정부가 함부로 노

동조합 내부의 문제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하게 뒤선 안 된다.

1980년대 영국에서도 대처 정부는 노조의 “특혜” 해소, “민주적” 절차 도입, 법 질서 확립 등을 내세워 악랄한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

예컨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내세우며 클로드 샵*에 대한 보호 규정을 삭제해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조 간부의 특혜’를 해소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징계를 활성화했다. 그중에서도 연대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또 ‘노조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노조 간부 선출 규정을 도입하는 동시에, 파업에 대한 사전투표를 의무화해 비공인 파업을 불법화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노조 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제화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시 정부는 위선적이게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일 때 가능하다. 노조 민주주의는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정부의

단협이나 규약 시정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령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하고 그 액수를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위해 정착시켜야 할 규약이다.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 간부들을 통제하며 조합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강제하기가 더 낫다.

조합원 가족 채용 특혜 조항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우선 정부가 이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해 투쟁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 조항이 과연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예컨대, 현대·기아차에는 신규채용 시 장기근속자 조합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단협 조항이 있다. 이것은 회사가 근속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해 온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를 지켜야 할 성과로 여기는 정서가 꽤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좌파 활동가들은

자기 조합원들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계급 전체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IMF 이후 파견법 등이 도입된 이래 비정규직 증가와 차별이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 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났고, 사측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자기 자녀 특혜를 요구하면,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비정규직 동료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동안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다. ‘노동자연대’는 여러 해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 왔다. 현대·기아차지부에서도 ‘조합원 자녀 특혜 조항을 삭제하자’는 대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목소리를 더 키워 해당 조항을 폐기하고 대신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요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로드 샵

사측이 노조원만 고용해야 하고 노조원 자격을 유지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제도.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포문을 열려는 정부

이정원

근속승진제를 둘러싼 철도 노동자들과 사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철도공사 인건비가 추가로 삭감돼 노동자들이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폐지를 수용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벌충해 주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계 수단인 임금뿐 아니라 근속승진제도 지키길 원한다. 승진 기회가 현장 통제 수단이 되면, 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력이 약화되고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도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를 민주노조를 떠받치는 주춧돌로 여긴다.

투쟁 전선

정부는 대표적 공기업인 철도에서 근속승진제를 폐지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의 추진 동력을 얻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려 한다.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공공기관들에 대한 압박은 금세 더 거세질 것이다.

철도노조가 근속승진제를 지키는 것은 전체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 전선을 지키는 데서도 중요한 고리다. 이는 지난해 1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돌아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주요 공기업 노조들은 정부의 경영평가와 연동한 성과급 삭감 압



차량지부 조합원들이 근속승진 폐지 반대 릴레이 인증샷 찍기를 해 철도노조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현장의 행동이 확대돼야 한다.

력에 투쟁으로 맞서기보다는, 개악안을 수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일부 벌충하는 방식으로 양보교섭했다. 이는 1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 전선이 무력화된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는 전체 공기업 노동조건의 하향 평준화였다.

올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전선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며 실질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철도노조 김영훈 지도부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노조 교섭단은 최근 재개된 교섭에서 사측의 근속승진제 대체안을 거부했지만, 승진 적체와 그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

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런 타협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정부의 묵인 하에 사측이 잠시 임금 손해를 줄여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사측은 근속승진제 폐지를 발판 삼아 임금과 고용을 성과 평가에 연동하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처럼 예고되는 공격들에 맞서기 위해서도 근속승진제를 지키며 노동자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만약 김영훈 지도부가 임금 손실 벌충을 대가로 근속승진제 대체안을 수용하는 근시안적 선택을 한다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투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활동가들의 과제

지금 현장에서는 근속승진제 사수결의 지부 성명서 발표, 인증샷 찍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의 지부장과 활동가들은 근속승진제를 지키자는 현장 조합원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지부 총회, 지구별 집회 개최 등으로 기층의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활동가들은 전국지부장 회의

등 노조 공식 회의에서 김영훈 집행부에게 근속승진제에 대한 양보 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강제전출 저지 투쟁의 전례를 보면 기층에서 대안적 투쟁을 건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김영훈 지도부에게 투쟁 조직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기층에서 조합원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는 공공기관 ‘정상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지만, 심각한 정치적 위기도 겪고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총파업 전선에 재 뿌린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

이경훈 지부장을 탄핵하고 투쟁 대안을 구축해 가자

박설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4·24 총파업 하루 전날 “확대 간부 파업”을 결정했다.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쥐어짜기와 파업 비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 최대 단일사업장 노조 집행부가 총파업 전선에 재를 뿌린 셈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파업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핑계를 댔지만, 현대차지부처럼 잘 조직된 노조는 마땅히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내걸고 앞장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은 현대차 조합원의 임금·고용·노동조건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경훈 집행부는 또 성완중 게이트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중단됐다”거나 이 때문에 총파업이 오히려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빠져 나올 빌미를 제공”한다고도 말했다.



4월 23일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 불참 규탄 현대차 조합원 집회.

그러나 이는 박근혜 구해주기에 나선 노동조합 관료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거나, 기껏해야 정치적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박근혜는 오히려 속도 있게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를 활용해 투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오히려 적에게 숨 실 틈을 주고 우리 편의 위기를 부를 뿐이다.

이경훈 지부장의 파업 불참은 무엇보다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스른 비민주적 처사다. 민주노총 파업은 이

미 가결된 상태였고, 현대차 조합원 90퍼센트가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에 동참해 과반이 지지를 보였다.

현장 조합원들의 열기

더구나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총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했다.

울산에서만 1, 2, 3, 5, 변속기 공장 등에서 대의원회 혹은 현장조직위원회가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주위원회, 판매위원회 등에서도 파업 지지 촉구가 잇따랐다. 사업부대표가 파업을 반대하던 울산 4공장에선 현장위원들의 연서명이 조직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서 좌파 활동가들이 주요 구실을 했다.

이경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파업 불참을 결정한 4월 23일 확대운영위에서도 사업부대표 다수는 오히려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때문에 지금현장의 분노는 상당하다.

이경훈 집행부가 파업 불참을 선언한 당일, 주요 현장 모임과 활동가들 1백여 명은 지부 사무실 앞에서 긴급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4일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항의 집회를 갖고 4·24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자’고 결의했다.

좌파 활동가들은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4·24 총파업 집회에 동참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확대해 되도록 사업부 별 파업을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단지 4·24 파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박근혜 정부와 현대차 사측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대차지부 조합원·활동가들은 민주노총·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을 어기며 보수 언론에 대고 총파업의 정당성을 비난한 이경훈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자가 제 임기를 다 채우게 놔두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시행령(안) 폐기도 필요하다

김문성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항의 운동이 다시 부상하자 유가족들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해 수용한 것이다. 끈질기게 싸워 온 유가족과 우리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를 마쳤고,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자고 유족들을 설득하던 11월에는 먼저 인양 얘기를 꺼냈다. 인양해서 실종자를 찾자는 것이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인양을 검토한 것은 침몰 원인 등 진상 규명과 희생자 수습보다는 사건을 빨리 정리해 버리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구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연단의 기술 이사는 당시 '구조가 아니라 배 인양을 위해 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이미 인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세금 도둑" 운운하며 유가족을 고립시켜 인양을 회피하고 진상 조사와 시신 수습까지 방해해 온 것이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자충수가 됐다.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조사위원회마저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부가 진실 은폐 주범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래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의 사람들이 유가족들의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 결정' 요구를 지지했다. 또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16일, 18일에는 수만 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특히 18일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봉쇄선을 뚫어 기세를 보여 줬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리스트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등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 나왔다. 대통령 자신이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주인공이 되게 생겼다.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4·29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고 요건 완화 시도 등에 맞서 민주노총이 벌일 일련의 파업 투쟁들과 만난다면, 정권으로서는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재·보선의 특성상 결과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만일 여당이 패하면 박근혜의 국정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도 30퍼센트대로 다시 떨어졌다.

그래서 박근혜는 서둘러 이완구를



"진실 규명을 위한 싸움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식을 잃고 이제는 더 잃을 것이 없으며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유가족들. 4월 16일 종로.

사퇴시키고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 이완구는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했다. 정부의 부패 스캔들을 이용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전진한 것이다.

꿈수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파헤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만일 지난해 결정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다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배를 건져 올려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인양 결정 지연이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정부의 꿈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월호 인양은 나중에라도 방해 공작을 펼 수 있으니 마지못해 수용하면서도 정부 시행령(안) 폐기는 한사코 피하고 도리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탄압하는 것만 봐도 정부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 가족협의회)'는 "인양 선언을 환영하지만 아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4·16 가족협의회'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조해 요구했다. "선제 인양을 위한 모든 과정을 '4·16 가족협의회'와 공개적으로 협의하면서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을 즉각 폐기[해야] ... 합니다."

정부는 인양 계획 발표라는 사이드

스텝을 밟는 동시에 탄압의 흑을 날리고 있다. 경찰은 18일 집회에서 광화문 봉쇄가 뚫린 것을 빌미 삼아 수사본부까지 차려 '시위 참가자들을 처벌할 것'이며,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벌써 당일 집회 참가자 두 명이 구속됐다. 구조 당시 교신 기록을 조작한 해경 지도부는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보여 준 것은 구조에는 무능, 진실에는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뿐이었다. 이런 정부가 정당한 집회를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고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 관련기사 6, 7면



주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으로 진실 규명 방해 주범임을 자인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과제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참가자들이 경찰 탄압에 위축될 이유는 없다. 박근혜가 요구 하나를 수용한 것 자체가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게다가 부패 스캔들로 정부가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 시행령(안)도 문구 수정 같은 정부 꿈수를 단호히 거부하고 폐기를 목표로 뚝심 있게 싸워야 한다. 또한 그런 점에서 '불법 폭력 시위', '패국 행위', '유가족이 아닌 외부 세력의 선동', '정치투쟁으로 변질' 따위의 비방에도 단호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각별히 우파적인 정부를 상

대로 싸우는 중이다.

이런 아비한 정부와 맞서 싸워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 내려면, 운동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하고, 무엇보다 조직 노동운동의 힘과 연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노동운동이 요구해 온 '이윤보다 인간성'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투쟁의 일부다.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요구와 투쟁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 다수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를 물러서게 할 잠재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 내 좌파 활동가들과 투사들의 몫이다.

대규모 시위와 행진도 계속돼야 한다. 4월 24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부터 25일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이 중요할 것이다.

마침 유가족들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거 참가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파업을 지지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도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5월 1일에는 1박 2일 철야행동도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들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한다.